

“치킨집 창업 이제 그만 기술로 승부해야 성공”

광주·전남 중장년 36% 미취업
속박 음식업 창업률 지난해 최고
경쟁력 없는 창업 폐업 잇따라

100세 시대, 부실한 노후 안정망에 광주·전남 지역 중장년 세대가 흔들리고 있다. 광주·전남 40세 이상 중장년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3명 이상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재취업·창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최근 만 40세~64세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중장년의 35.5%에 달하는 44만 6000명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지역 중장년층의 숫자는 광주 57만2000명·전남 68만5000명 등 125만 7000명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1500명(0.3%), 3700명(0.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지역 중장년 가운데 미취업자 비중은 광주 32.7%(18만7000명), 전남 37.8%(25만9000명)에 달했다.

매년 중장년 층의 숫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10명 중 3명 이상은 직장이 없는 셈이다. 특히 등록취업자 가운데서도 광주 6만4000명, 전남 7만7000명 등 14만1000명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까지는 취업체 일을 하다가 지난해 미취업 상태로 돌아선 광주·전남 중장년은 8만 4000명(광주 3만8000명·전남 4만6000명)에 달했다. 2년 연속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이들도

36만3000명(광주 15만명·전남 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탓으로 해석된다.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없어 근로·사업소득이 아예 없는 중장년 비율도 광주 22.5%, 전남 28.0%에 달했다.

이처럼 중장년에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창업을 택하는 사례가 잇따른 통계로 이어졌다. 하지만,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없는 창업은 오히려 '레드오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전통서비스업의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치킨 창업의 경우 광주·전남은 과밀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치킨집 1곳당 인구 수는 광주 1338명·전남 1321명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세종에 이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나란히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난 속에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숙박·음식업종 창업률은 25.6%로, 최근 5년(2016~2020년)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창업률은 제조업(10.2%)과 운수·창고(10.8%), 기타 서비스(18.3%), 도·소매(18.3%) 등 다른 업종 창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숙박·음식업종 창업률이 높은 것은 전문 기술이나 경험 없이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쟁력 없이 창업에 뛰어들면서 폐업도 쉽게 이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탄탄한 기술력과 업종 간 경쟁력 비교, 시장 조사 등의 준비 과정이 꼼꼼하면 중장년의 창업도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면으로 계속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민주·열린민주 합당...당명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26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로 하는 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3월 8일 창당대회를 연 뒤 1년 9개월여만에 민주당과 통합된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밝힌 여권 대통합 작업의 일환이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최강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당 대 당 통합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당은 정치개혁 의제로 ▲비례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주선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이 55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 의제 법제화에 합의했다.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은 3명으로 민주당과 통합 시 민주당 의석은 172석이 된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눈 덮인 마을 ... 여기는 '겨울 나라'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 26일 오전 무안군 현경면의 가옥들이 눈에 덮여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연말 코로나19 확산 막아라”...방역 초비상

성탄절 광주·전남 115명 확진
경로 미상 집단감염도 다수

광주·전남에서 모임·만남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전염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2면〉

방역당국은 사·도민을 대상으로 3차 백신(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외출·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서는 40명, 전남에서는 19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에선 북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3명, 광산구 소재 유치원 관련 4명, 동구 소재 공공기관 관련 1명, 북구 소재 중학교 관련 2명, 타 시도 확진자 관련 4명, 기 확진자 관련 21명, 감염경로 조사 중 5명 등 감염원도 다양하다.

시설별 전수 검사도 잇따르고 있다. 남구 한 요양병원에서는 근무자가 다른 확진자와 목욕탕에서 동선이 겹쳐 확진된 뒤 360여명을 검사한 결과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병원을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하고 추가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남구 어

린집, 광산구·서구·남구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3300여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7명(지표환자 포함)이 확진됐다.

사망자수도 80대 2명이 추가돼 39명으로 늘었다. 광주에선 특히 최근 집단 감염에 이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사례가 늘면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증·준중증 병상도 한 자릿수로 줄었다. 중증·준중증 병상은 전남대병원 1병상(총 16병상), 조선대병원 5병상(13병상) 등 5병상 뿐이고, 준·중증 병상도 전남대병원에 4병상(16병상)만 남았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여전하다. 전남에서는 이날 여수 7명, 목포 3명, 순천·광양·화순·해남 2명씩, 함평 1명 등 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서 성탄절인 지난 25일에도 광주·전남에선 모두 115명이 확진됐다.

광주는 이날 북구 요양병원(4명), 광산구 유치원

(6명), 동구 공공기관(1명), 광산구 중학교(2명), 전남, 경기 등 타 시도 확진자 관련 17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광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7명, 역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신규 확진자 18명, 해외 유입 2명 등 6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도 크리스마스 당일 48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나주 8명, 목포·여수 각각 7명, 해남 6명, 순천·화순 각각 5명, 광양 4명, 보성 3명, 영암 2명, 함평 1명 등 22개 시·군 가운데 10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시·도 방역 관계자들은 “기존 델타변이보다 전염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고, 모임 등이 많은 연말연시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시·도민께서 백신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만이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방역협조를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광주 주택가 가보니 ▶6면

양현종, KIA와 계약...“실력으로 보여줘야” ▶18면

세계 뒤늦게 K컬처 2022년에도 계속된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투자진흥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이전 및 투자시 세계감면, 다양한 보조금 등 지원



문화산업 5억 이상, 관광산업 등 30억 이상 투자시 다양한 인센티브!

- 법인세 소득세
- 재산세 15년 범위 내 감면
- 취득세 면제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인센티브 지원
-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컨설팅 보조금